

<제61회 한경연 포럼>

무상복지시리즈 정책의 파급영향과 과제

참가대학생 소감문

이명섭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0년 대한민국을 2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본다면, ‘안보’와 ‘복지문제’로 귀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교수인 안상훈 교수의 지적처럼 점진적인 복지의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엔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이 언젠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이고, 그러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나서는 결국은 불어질 문제가 복지 문제이다. 그것은 토론자였던 신중섭 교수가 지적한 대로 꾸준히 ‘선진국이 되면 복지가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입한 탓이다. 그렇게 교육받은 국민들은 당연히 ‘잘 사는 나라 = 복지국가’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의 대한 잠재의식을 민주당이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는 것이다.

복지 자체를 부정할 수 없겠으나,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합리적 복지’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를 하려면 그 만큼의 자원조달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복지’문제는 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증세가 필요하다면 강력히 요청해서 하던가, 아니면 자신 있게 돈이 없기 때문에 ‘복지’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던가 해야 하는데,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정치적 논리에 밀려 경제적 ‘사실’을 밝힐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자신의 표와 정치적 ‘생명선’에 걸려 ‘증세’를 논의하던지, ‘복지’를 폐기하던지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현실이. 합리적이지도, 솔직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현 정치권의 세태가 안쓰럽기만 하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도 이 문제가 단순히 ‘복지’라는 서비스를 받고 끝나는 줄만 안다는 것이다. ‘공짜는 없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모른 채 국민들은 그저 ‘복지’라는 키워드만 믿고 제시한 정치인만 보고 따라가고 있다. 후에 엄청난 후폭풍은 생각지도 않은 채, 그들은 그저 ‘포퓰리즘’적인 정책에 휘둘리고 있다. 당장 수조원이 들어갈 엄청난 재원에 ‘복지’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지도 않은 채, 장밋빛 미래만 바라보며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윤택한 사회는 좋은 것이다. 장기적으로 부정하지도 않는다. 복지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가 가져올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그저 국민들이 일부 정치인의 달콤한 키워드에 휩쓸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재원조달의 방안과 복지한국의 대책, 방지책 등을 제시해주고 있는 정치인이 없는 게 아쉽고,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국민 일부분이 아쉽다. 보다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정세리 / 삼육대학교 경영학과

최근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반값 등록금”, “반값 주택” 등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무상복지 시리즈”들에 대해 이번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이 시리즈들의 파급영향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다. 약 3시간 30분의 시간동안 우리들은 각계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고, 그동안 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파급효과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런 무상복지 시리즈들은 단순한 포퓰리즘이라 생각한다. 사실 어느 누구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남에게 나눠 주는데 동의할 사람이 있을 것이며, 이런 분위기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생산하려는 동기를 떨어뜨리게 되는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었다.

그렇게 김영용 원장님을 시작으로 포럼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런 정책들을 경제학적으로 풀어 설명해 주신 현진권 교수님이 기억에 남았다. 정치라는 것이 다 사적이익을 위해 일할 뿐이고, 51%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였다. 다수인 국민들은 굉장히 적은 코스트를 가지는 그런 정치에 무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그 1%를 더 차지하기 위해 공급자인 정치인들은 이런 정책들을 내 놓는 것이라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올 세금폭탄들, 그리고 그것들이 경제 전반에 끼칠 영향들까지 듣고 나니 다시 한 번 공짜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무상복지를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무상복지라는 것에 대해 듣다보면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듯이 그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 현재 북한만이 남아있고, 다른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시점에서 우리는 왜 그 전처를 밟고, 역행하려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아직 대학생인 내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정책들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하나라고만 느껴질 뿐이다. 그리고 포럼 말미에 2010년 지금, 그러니깐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현인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답을 찾으려하는지 모르겠다는 농담 섞인 발언이 가장 쉬우면서도 이 상황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자유 시장경제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포럼들을 듣고, 올바른 시각을 갖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의 하나로써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시대에 맞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김재욱 /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일단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복지 시리즈의 정책'에 대한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다. 말로만 듣던 '무상복지 시리즈'의 기원과 문제점에 대해서 대학생의 관점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가며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 다만 논점에 있어서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의 과급영향과 과제보다는 오히려 복지를 왜 하는가, 왜 하면 안 되는가라는 부분으로 약간은 치우친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 마지막 질의응답시간에도 꽤 널꺼서 말씀해 주셨듯이, '무상복지 시리즈가 실행된다면 어떠한 점에서 얼마만큼의 경제적, 재정적 손실이 야기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현 세대, 혹은 미래 세대가 짊어지고 가야할 부담은 어느 정도이다.'라는 측면에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면 정말 복지의 관하여 전혀 알 수 없었던 진실을 깨우치는 소름 돋는 자리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연구원의 포럼은 고등학교 시절 막연히 배우던 '복지'와 대학 강의에서 들어왔던 마냥 행복하고 따듯할 것 같은 '복지'라는 단어에 대하여 한번쯤은, 아니 여러 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복지' 자체가 정치권이 국민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또한 출처도 모르고(이러한 뇌물이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지도 않고) 뇌물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굳이 저것이 우리사회 발전에 해악이 될 것인가? 라고 알게만 생각했던 나 자신에 대하여도 많은 반성을 하였다. 내가 처음 '무상복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복지는 전체를 위한 것이니까, 당연히 모두에게 분별없이 무상복지를 해야할만한 이유가 있지. 또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에게 다 해준다는데 특별히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라는 알팍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대학생이 정치권이 주는 뇌물을 받아들이고 '좋은 게 좋은 거겠지'라는 철없는 생각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세미나를 들으며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을 위하여 서민과 중류층을 위한 정책상품을 개발할 유인으로써 언제나 '복지'라는 단골메뉴가 등장하며, 이러한 정책의 선점을 통하여 정치시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공감을 하였다. 또한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권의 극도로 이기적인 전략 아래에서, 알면서도 또는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하는 '합리적 무지'에 빠져들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300조의 세금으로 고작 3조원의 가치를 내는 '포퓰리즘 정책'들은 언제나 정책의 가치보다 정책을 위한 비용이 몇 배, 또는 몇 십배 부담이 되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들은 국가재정과탄으로 이어지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아닌 일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되어 국가발전에 전혀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다. 또한 복지정책들이 국제간 비교를 통해 단순 스웨덴과 한국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스웨덴이 복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분야의 경제자유 때문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스웨덴처럼 우리도 되어야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語不成說)에 불과하다.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무상복지'에 대하여 막연한 환상이 먼저 각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릇된 각인을 뒤집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더 철저하고 논리적으로 그 환상을 깨트릴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활동의 주된 이념으로 추구하는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생들도 이러한 홍보와 교육의 객체가 될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 대학생들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무상복지'에 관한 논쟁들을 받아들여, 빈틈없는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고 근거 없는 환상에 대한 철없는 인식들을 바로잡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지금의 상황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가장 큰 공헌을 해온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이다. 하지만 위기에 대처하는 태도에 따라 우리에게 기회는 될 수도 있고, 더 큰 위기로 악화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에 기민하게 대처하여, 작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하여 보답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망국의 지름길'을 택하도록 지켜 볼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